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인

국 무 총 리

2017년 3월 14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

(법무부 소관)

홍 윤 식

●법률 제14581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에게 비위가 있어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인

국 무 총 리

2017년 3월 14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

(법무부 소관)

홍 윤 식

●법률 제14582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